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. 16(토)	
		작성 · 문의	경제조정실 해양교통정책과 과장 송기진 / 사무관 안병수 (Tel. 044-200-2239)
엠바고	1.16(토) 11시 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

‘안전총리’ , 올해 첫 안전행보는 ‘지하철’

- 최근 지하철 4호선 사고 발생에, 16일(토) ‘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’ 방문
- “승객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, 사고 제로(0) 목표로 안전운행 하라”
- “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 개발하고 반복 훈련 실시하라”

□ 황교안 총리는 16일(토) 오전 서울메트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방문하여 “승객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‘사고 제로(0)*’를 목표로 안전운행 하라”고 지시하고,

○ “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한 뒤 반복 훈련을 실시할 것”을 강조했다.

※ 참석 : 최정호 국토부 2차관, 조경규 국무 2차장, 심오택 비서실장,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, 구본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 등

* 최근 5년 간('10~'14) 총 2,177건 : 에스컬레이터(626건, 29%), 승강장(621건, 29%), 계단(381건, 17%) 순으로 사고가 집중

○ 황 총리는 최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, 직접 지하철역을 방문하여 정부의 철도안전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, 현장에서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.

○ 특히, 지하철 2·4·5호선이 경유하고, 상권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유동인구와 노인이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메트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찾았다.

- 황 총리는 이날, 방문 현장에서 스크린도어 안전관리·변전실·승강장 안전발판, 화재대비시설 등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살펴보았다.
 - 황 총리는 역사에 설치된 비상호출기 버튼을 직접 눌러 역무원을 호출하면서,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였으며, 자동심장제세동기의 작동여부도 함께 확인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“철도사고는 차량과 시설 노후화, 안전의식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”고 말하고,
 - 특히 “최근 지하철 4호선 사고에서는 비상대응매뉴얼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심각한 수준”이라고 우려하며,
 - “정부와 철도운영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 전반에 대한 보완·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 - * '14년 1월~'15년 6월 중 서울 지하철 운행중단은 총 48건, 이중 64%는 부품결함, 신호장치 이상 등에 기인하며, 화재·승객부주의 26%, 운행 부주의 10%
- 황 총리는 특히, “우선 철도종사자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우선 업무관행을 확립해야 한다”고 당부하며,
 - “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노후화된 부품 및 전기시설 등도 적기에 정비·교체하고 비상대응 체계도 개선할 것”을 주문했다.
 - 황 총리는 또한 “철도역사 내 안전사고 위험도 높으므로, 사고다발 시설을 집중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*하라고 지시하고,
 - * 자살방지를 위한 스크린도어 전면설치('17년). 에스컬레이터 속도 하향조정 등

- “요즘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시각적인 장치들은 안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, 청각적인 방법 등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라”고 주문했다.
- 한편, 국토부와 서울메트로는 이날 황 총리에게 **철도운영자의 안전책임 및 철도차량·시설 관리 강화**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**도시철도 안전관리 대책** 등을 보고하였다.
 - 국토부와 서울메트로는 이와 함께 “비상대응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다”는 황 총리의 지적과 관련 “향후 비상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완비하고,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현장중심 비상대응 역량도 제고하겠다”며,
 -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 도시철도 특별안전점검(‘16.1.11~25) 결과를 토대로 노후시설 및 차량 적기 정비·교체 등 도시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대폭 개선·보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
- 황 총리는 국토부와 서울메트로의 보고를 받은 후 “안전사고는 국민과 정부, 철도운영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근절될 수 있다”며,
 - 이번 사고를 계기로 “관계부처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여 철도안전정책을 수립·추진”하라고 지시하고,
 - 철도운영자는 고객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투자해줄 것”을 당부했다